

# 해양경계획정에서의 형평원칙 논의

-동중국해 경계획정을 사례로 분석하다

덩리바이(丁丽柏)<sup>1)</sup>

개요 :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국제 해양경계획정의 원칙과 방법을 이론적으로 탐구하고 경계획정 관행을 분석하여 중일 동중국해 경계획정 문제에 대해 필자의 관념을 제시해 보았다. 또한 중일 동중국해 경계획정 문제에서 어떤 방식으로 형평 이념을 경계획정에 응용해야 하는지에 관해 국제법적인 시각으로 중일 동중국해 경계획정의 원칙과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하였다.

신비롭고 드넓은 쪽빛의 바다는 지구의 70%를 차지한다. 과거에 바다는 단지 인류에게 정복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인류가 이용하는 자원이 점점 증가하고 육지의 자원이 부족해지자 인류는 바다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또한 바다는 전략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 많은 국가들이 해양에 대해 주권선포를 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가 늘었다. 이에 따라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분쟁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 1. 해양경계획정에서의 형평이념의 응용

현재 국제사법재판소는 해양경계획정에서 어떤 한 원칙이나 특정한 방법을 가지고 경계획정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경계획정의 과정에서 어떠한 이념에 기초해 경계획정을 하여 공평한 결과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다. 필자는 형평원칙을 경계획정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하는 것이 해양경계 획정에서 타당성이 있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1982년 해양헌법이라고 불리는 국제연합 해양법협약(이하 협약)은 형평원칙을 모호하게 규정하였다. 당시 자연적 연장의 원칙을 주장하는 쪽과 중간선 원칙을 주장하는 쪽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취한 방식이었다. 국제사법재판소규약 제38조에는 “국제법에 기초하여 형평한 결과를 이루기 위해 협의에 따라 해결한다”고 규정되어있다. 형평이념과 형평원칙은 다르다. 이념은 더 사상적이고 목표와 원칙을 강조한다. 형평이념은 형평원칙보다 더 융통성이 있고 문제해결의 결과를 비교형량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형평이념이 정확하게 정해진 규칙이 아니어서 형평원칙과 비교해 보면 형평이념은 형평원칙보다 더 포용성을 가짐과 동시에 지도적인 성질을 가진다.

---

1) 서남정법대학 법학대학원 부교수

## 2. 해양경계획정에서의 형평의 구체화

협약 체결 이후 많은 연해국들이 실전을 통해 각기 다른 시각에서 방법과 이론을 찾기 시작하면서 국제법과 관련된 원칙과 이론이 발전하였다. 그 과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은 자연적 연장의 원칙, 등거리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이 있다.

### ① 자연적 연장의 원칙

1945년 9월 28일 미국이 트루먼 선언으로 대륙붕은 육지의 자연적 연장으로 해당 연해국의 육지에 속한다고 언급하였다. 미국은 인접국가가 대륙붕의 해저 지역과 해저 토양의 천연자원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것이라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자연적 연장의 개념의 등장하게 되었다. 1958년 제네바 대륙붕 협약 제1조의 ‘인접해안’을 언급함으로써 대륙붕은 연해국 육지의 자연적 연장이라는 사실을 긍정하였다. ‘인접’이라는 이 단어와 ‘자연연장’이 학술 용어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1968년 북해대륙붕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처음으로 과학적·권위적으로 자연적 연장 원칙 개념은 언급했다. 재판부는 대륙붕은 육지에서의 자연의 연장으로 연안국의 대륙붕에 대한 권리는 사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본래부터 존재한다고 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모든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자연적 연장을 존중하면서 관습법인 형평의 원칙에 따라 협의에 의해 경계획정을 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하였다.

1977년 영국-프랑스 중재안에서도 중재법원은 자연적 연장의 원칙을 긍정함과 동시에 자연적 연장원칙의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언급하며 특수한 상황에서 추가로 제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대륙붕협약 제6조에 ‘특수한 상황’의 규정이 있는 것과, 관습법이 형평 원칙을 강조하는 것과 상관없이 ‘영토의 자연적 연장’이라는 이 근본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한 나라에 속하는 섬이 다른 나라의 영토를 구성하는 대륙붕으로 자연적으로 이어져 있을 때 영토의 자연적 연장원칙은 무시할 수도 또 절대적으로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자연적 연장원칙은 협약 제76조 1항<sup>2)</sup>에 규정되어 있는데 영해 너비 측정을 위한 기선량에서 대륙변계 외연까지의 거리가 200해리 미만이면 200해리까지만 확장된다고 밝혔다. 이 규정 전반부에 규정된 것은 자연연장 개념의 대륙붕이며, 절반에 규정된 것은 거리적 개념의 대륙붕이다.

### ② 등거리 원칙

---

2) 제76조 1. 연안국의 대륙붕은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대륙변계의 바깥끝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바깥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하층토로 이루어진다.

등거리 원칙은 1958년 대륙붕협약 제6조에 규정되어있는데 이 원칙의 최초 개념은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1969년 북해 대륙붕 안전에서 제시한 것이다. 양국은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등거리 원칙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경계를 따로 정해야 한다’ 는 것을 제외한 등거리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 등거리 원칙이 등장한 이후 대륙붕 경계획정 이론에서 해당 이론이 어떤 원칙적 지위를 차지하느냐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등거리 원칙이 일반 국제법 혹은 일반 관습법 원칙의 논점이 된 것은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그 원칙적 지위를 부정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등거리 원칙이 대륙붕 제도에서 우선적인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등거리 원칙은 관련 국가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이 된다고 하였다. 등거리 원칙은 법률적인 원칙이 아니고 하나의 경계획정의 방법일 뿐이다. 1977년 영국-프랑스 경계획정안, 1985년 리비아-몰타 대륙붕 경계획정안, 1999년 에르트리아-에멘 경계획정 중재안, 2001년 카타르-바레인 해양 경계획정안, 2002년 카메룬-나이지리아 해양경계획정안 등의 사례에서 등거리 원칙의 적용을 긍정하였으나 경계 획정안의 원칙으로 그 방법적 지위를 원칙적 지위로 승격시키지는 않았다.

### ③ 비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은 형평원칙에서 파생된 중요한 원칙으로 비례의 원칙에 따르면 연해국의 해안선의 길이와 해저가 비례를 이루지 않는 경우 현저하게 불공정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한다. 북해 대륙붕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형평원칙에 따라 경계획정을 하며 연해국의 대륙붕과 각국의 해안선의 길이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튀니지-리비아 경계획정안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는 비례의 요소가 매우 중요하며 비례의 개념은 한 국가의 대륙붕 면적과 해안선 길이의 비례라고 하였다. 공평한 결과를 이루기 위해 이 개념은 합리적인 정도의 비례를 이루는 선에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며 형평원칙에 따라 경계획정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형평한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례를 이루는 법률적 개념을 적용하여야 한다. 1985년 리비아-몰타 대륙붕 경계획정안에서 비례의 요소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인정을 받게 되었고 법원은 “한 국가의 해양 접촉 면적의 넓이는 매우 중요하다” 고 강조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확정된 경계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용된 비례성의 정도가 합리적인 수준인지를 심사해야 한다고 정리하였다. 즉 비례 원칙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상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각 경계획정을 하는 방법은 다 다르고 적용하는 방식도 각기 다 흠결이 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 적용은 다 공평한 결과를 이루기 위함이며 각 방법들은 다 어느 정도 형평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

는 사실이다. 만일 상술한 방법이 당사국의 협의에서 적용이 된다면 당사국의 협의 자체가 형평이념의 구체적인 실현이다.

### 3. 형평과 중국 해양경계획정문제 탐구 : 동중국해를 사례로

북에서부터 남까지 중국은 8개의 인접해 있거나 해안을 마주보고 있는 국가들과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획정을 진행중이다. 중국정부는 형평원칙과 자연적 연장의 원칙으로 경계획정을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1998년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 법’에 따르면 중국과 인접국이나 해안선을 마주하고 있는 국가 사이에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이 중첩될 경우, 국제법의 기초 위에 형평원칙에 따라 협의를 통해 경계획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면 주변국의 주장과 중국이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자연적 연장의 원칙과 형평원칙으로 경계획정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형평 이념으로 중국의 해양경계획정을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 의미로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동중국해 해역을 예로 들면, 동중국해 해역과 관련이 있는 일본, 한국이 경계획정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현저히 다르다. 동중국해는 중국, 일본, 한국, 북한 이 네 개의 국가들을 둘러싸고 있는 광활한 바다이다. 동중국해 대륙붕의 동서 사이로 오키나와 해구가 남쪽으로 자연적으로 뻗어 있고 그 깊이도 1000m가 넘어 중국의 동중국해 대륙붕과 일본의 대륙붕의 자연적인 경계를 형성하고 있다. 중, 일, 한 삼국의 동중국해와 관련된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각국의 입장이 현저히 다른데 이 쟁의에 대해 삼국이 주장하는 부분에는 어느 정도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중국과 한국은 자연적 연장의 원칙으로 경계를 획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중국은 오키나와 해구가 일본의 류큐 대륙붕과 동중국해 대륙붕의 경계선을 형성한다고 여긴다. 일본은 등거리선 원칙으로 경계획정을 하자고 주장한다. 1974년 일본은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과 동중국해에 소위 공동개발구역을 지정하여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였고 한국과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이 협정은 조약 성립 원칙을 위반하였고 동중국해 경계획정에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합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 일본, 한국이 위치한 지리와 지질적인 구조 및 기타 관련 사정을 생각해 보면 동중국해 경계획정의 주요 중점은 중일 양국의 대륙붕 경계획정이다. 협약 관련 조문과 국제사법재판소 및 중재법원의 판례를 참고하여 동중국해 대륙붕의 구체적인 사정과 각국의 해양 안보, 자원수요에 따라 중국은 형평 이념을 주요 원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996년 2월 일본은 자국 연해에 영해기선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정하였는데 이로 인해 발생할 중국과 한국과의 어업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 외무성은 “전면 확정, 부분적용”의 원칙을 정하여 처리하였는데 이 의미는 전면적으로 배타성이 있는 경제수역을 정하나 한국과 중국 양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1996년 7월 20

일부러 일본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관련 어업 등 주권권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다. 이 법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의 어업자원을 보호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함이며 외국 어선이 자국 수역에서 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원칙적인 규정을 한 것이다. 해당 법률은 중국과의 관련 문제에서는 적용하지 않음으로 일본 주변 어장에서 발생할 불리한 영향을 잠시 만들지 않기 위함이었다.

동중국해 해역에서 일본이 중국 영토인 다오위다오를 강점하여 자국 영토로 편입시킨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오래전부터 다오위다오 및 부속 도서는 중국의 영토였으며 일본 오키나와에서 417km 떨어져 있는 5개의 무인도와 3개의 식물이 자라지 않는 암초를 포함한 곳이다. 다오위다오는 중국 타이완성 영토의 일부였고 명나라 시기에는 이미 중국 해양 방어선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었다. 한세기 반의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은 이에 대해 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1879년 일본은 류큐 등의 섬을 침략하여 점령한 뒤,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타이완섬과 관련 부속도서 및 평후(澎湖)열도의 섬을 강점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다오위다오이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타이완과 평후섬을 중국에 반환하였으나 다오위다오 열도 관리권을 조용히 미국에게 넘겼다. 1971년 미일은 오키나와 협정을 체결하면서 비밀리에 미국이 다오위다오를 오키나와로 편입해 반환한다는 내용을 조약에 넣었고 이는 수많은 중국 동포들의 다오위다오 보호운동에 불씨를 당겼다. 그러나 미국은 그 해 10월, 변함없이 일본에게서 넘겨 받았던 다오위다오를 일본에게 반환한다고 밝혔다.

1960년대, 다오위다오 일대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발견한 후 일본은 행동을 취하여 석유 채굴을 시작하였다. 이어서 시찰선을 보내어 다오위다오는 중국에 속한다는 섬의 표식을 훼손하고 다오위다오에 일본 섬의 이름을 부여하였다. 중국과 일본은 다오위다오의 전략적 중요성과 자원의 풍부함 때문에 다오위다오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쉽게 굽히지 않을 것이어서 다오위다오의 동중국해 경계획정에서의 역할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다오위다오는 중국과 일본 해역의 중앙에 위치해 있다. 섬의 면적은 매우 작으며 음용할 수 있는 물도 나오지 않고 자연자원도 부족하여 외부의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인간이 거주를 유지할 수 없으며 독자적인 경제생활도 불가능하다. 다오위다오와 부속 도서의 상황에 대해 고려해 보았을 때 다오위다오의 동중국해 경계획정에서 역할은 ‘대륙붕협약’ 제121조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21조에는 인간이 거주를 유지할 수 없거나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암초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중국과 일본은 협상을 통해 비지(飛地;~령, A국 경내에 있으면서 B국에 예속된 영토)의 방식으로 다오위다오를 처리하여 다오위다오를 중국대륙에서 멀리 떨어진 중국령의 형식으로 처리하여 12해리의 영해를 부여하고 동중국해 경계획정에서 무효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는 국제법 실천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동중국해 문제에 편리성을 제공해 줄 것이며 전향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중일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경계획정은 각 국가의 해역이 서로 중첩되어

있는 데다가 한국, 북한도 동중국해 해역에서 경계확정을 진행하고 있기에 이런 요소들은 이 지역의 관련 분쟁을 더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그러나 해양경계확정을 하지 않으면 어떤 형식과 내용의 협력이나 개발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 해양경계확정은 새로운 제도이지만 경계확정의 이론과 연구는 국가의 이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매우 중시하는 부분이다. 조속히 형평원칙으로 경계확정을 하여 각국의 해양경계가 해양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도움을 주고 경제의 공동발전과 역내 안보의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